

업무매뉴얼의 경우에도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주무관청 담당자는 물론 사업시행자, 재무적 투자자용 매뉴얼이 각각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어 있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혼란을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BTL이 도입된 지 이제 1년 우리나라와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BTL 사업 경험을 축적한 선진국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이며, 미리부터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교육시설은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BTL 제도의 초기 도입 목적인 시설 수준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시설 BTL 사업의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PFI로 추구해야 할 학교건축의 의미와 가치

###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School Architecture in PFI Processes

류 호 섭\*

Ryu, Ho-Seop

#### 1. 학교건축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학교건축은 한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목표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가, 그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진 공간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공공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술적으로 보면 적어도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민간시설에서는 돈이 없어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지속성 있는 건축물로 앞서 나아가는 공공 건축물인 것이다. 과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신축되고 있는 학교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건축되어 있고, 연구자나 행정가, 건축가들은 이런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향후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학교건축을 만들어가야 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학교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로 접근해야 만이 학교건축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의 담당 부서나 공무원들도 단순히 재정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건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학교시설을 건축한다는 것의 목표와 개념을 교육적인 측면, 시설 확충이라는 측면, 운영의 측면에서 정립한 후, 그를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서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2. PFI와 BTL, 복합화의 의미는 커뮤니티 스쿨 만들기이다.

원래 PFI의 취지는 공공건축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기업의 자본과 노하우를 받아 들여 보다 절약된 예산으로 창의적인 건축물과 운영을 기대하고자 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BTL이란 그 운영방식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PFI보다는 BTL이란 단

\*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즉, 사업방식만이 우선시되고 사업의 근본 취지는 뒤로 밀려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필자는 학교건축설계의 질을 향상하고자하면 우선 여기에 대한 인식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6년 들어 주로 언급되고 있는 용어는 BTL 사업방식이란 단어와 복합화라는 2개의 단어이다. 필자는 이 2개의 단어가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기회에 2가지 단어가 주는 의미를 모아 '커뮤니티 스쿨 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재정투자 방식과 물적 결합을 표현하는 단어를 각각 내세우기보다는 2개를 결합하여 내세우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으며, 실제로 학교현장의 교사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업의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역주민, 학교현장, 건축전문가들이 모두 하나의 학교를 논의해가면서 건축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특징 있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번 6월 23일에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실시한 국제 심포지엄의 제목도 이런 연유에서 '커뮤니티 스쿨'로 정해진 것이다.

### 3. 시설행정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는 약 10년 전 부터 4년간 교육부의 위촉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교육시설 관련 평가항목에 "교육시설에 대한 연구 실적"이라는 항목을 만들었다. 그리하였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교건축의 기본계획을 통해 설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약 10년 정도 지나면 이 항목은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 정도 계획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 전국적으로 학교시설 계획 및 설계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듯 목표하는 바에 따라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꾀할 필요와 아울러 적절한 시기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제는 PFI에 의한 BTL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단순한 재정투자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시설 정책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고 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개발·정착시켜 학교시설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학교시설 발전을 위한 여러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개선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설계방법과 설계자의 선정방법인 것이다. 처음 실시했던 작년에는 설계는 사업자 선정 속에 포함된 일괄 발주였으나, 올해에는 그 방식을 바꾸어 기본설계는 사업자 선정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 같다. 물론 사업자나 설계자의 선정 방식이 가격입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실제로 학교건축을 모르는 설계사무소가 가격입찰 방식으로 결정된 후 주어진 기한 내에 설계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대로 좋은가? 이것저것 고려하면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추구하려는가? 이제는 학교건축 설계도 전문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사 모두가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하였고 건축사 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하여 모두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학교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기본계획이니 실시 설계안을 결정하고 수행자를 결정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전문화시킬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런 취지에 따라 기본설계가 아닌 기본계획안을 공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그를 위한 조건 정리나 지침서 작성, 그리고 당선안의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청과 학교건축 연구자(계획, 설계 등), 학교 측(개축이나 증축, 이전 신축인 경우),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조하여 작성할 것도 제안한다. 그리고 당선 안을 실제의 사업자와 협의하여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최근 어느 교육청의 설계심의회에서는 BTL사업에 의해 결정되어진 설계안을 교육위원이 과거의 관습적인 학교형태로 고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행정아래에서

어떻게 PFI가 의도한 창의성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바꾸어야 한다.

향후 지역주민의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학교를 건축하려면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범적으로 1-2개교를 교육부 주관 혹은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 다시 시행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물론 시행착오와 모순점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누군가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이처럼 행정이 먼저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활은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생활을 유도한다' 라는 구절에 '건축은 커뮤니티를 만든다'라는 것을 추가하고 싶다. 더구나 그 건축물이 공공 건축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학교건축을 만들어가는 여러 행정은 결국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정으로 위치시켜 하나하나 개선·변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짧은 기본계획이나 설계기간을 늘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학교를 얼마나 빨리 건축하는가 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관심 속에 건축되어 가는가를 최대의 가치와 목표로 생각하고 교육시설행정도 그에 모든 방향을 조준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은 더 이상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급되는 시설이 아닌 그 지역의 주민의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이며 공공시설이라는 인식하에, 공공시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짓는 값 싼 시설이 아니라 시설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시설을 리드해 나아가는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그러기 위한 방식으로 PFI에 의한 BTL사업을 실시한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 3. 설계사무소도 학교건축에 대한 공부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건축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중·소규모의 설계사무소가 한 개의 프로젝트라도 아쉬운 실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연유로 일단 해당 설계사무소가 과연 설계할 능력의 유무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입찰하여 당첨(그 프로젝트에 대한 능력보다는 가격을 잘 맞추어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운이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첨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되면 된다는 당첨지상주의(?)가 팽배하다. 본인들이 어떤 학교를 설계해야 하는지는 당첨 후의 문제이다. 실제로 필자에게도 설계사무소로부터 교육청에서 받은 지침서 내용을 모르겠다고 자문을 구하러 온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이래서는 학교건축의 설계가 그 설계사무소의 영업대상의 하나라는 인식이다. 제발 설계사무소도 평소에 학교건축에 대한 공부에 힘쓸 것과 좋은 학교건축을 제공하여 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인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적극 부탁한다.

## 4.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이상으로 언급한 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실 분도 있을 것으로도 생각하나 학교건축이 공공건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계획 및 설계 과정과 건축과정, 운영, 유지관리의 모든 면에서 언젠가는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토론을 거듭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은 투자로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적정선의 현실적인 그리고 이용자의 생활과 교육의 방향성을 고려한 투자금액을 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설계나 기술적인 면에서의 민간의 최대한의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며, 학교건축이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관점에서의 행정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21세기에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